

북한에서 시장의 활용과 통제: 계급의 시장*

정영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200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이례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군대가 선군시대 주력군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계급 역시 경제건설의 주역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¹⁾ 노동계급에 대한 강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선군후로(先軍後勞)’ 원칙에 따라 군을 좀 더 앞세운 것에 비하면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목표로 현재 ‘150일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경제 정책에서도 몇 가지

* 이 글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1) 2009년 신년공동사설은 “노동계급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고조력사의 주인공이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전투부대”로 규정하면서 “선군시대 돌격투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신년공동사설.

2) ‘150일 전투’는 4월 20일 시작해 9월 1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보아, ‘150일 전투’가 끝난 이후 새로운 ‘전투형 동원운동’을 전개할 가능

변화가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는 시장에 대한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전통적인 대중동원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조건에서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노동자들을 공장과 기업소로 복귀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시장이야말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당국의 딜레마가 있다. 이미 시장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 사회에 침투했으며, 비록 확대와 축소가 반복될 수 있지만 폐지 자체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역시 시장을 ‘일시적 공백’을 메울 보조적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다.³⁾ 즉,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억제하고,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시장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적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 작동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미 북한은 재정 문제, 통화량 문제, 가격 문제, 화폐유통 문제 등 시장 작동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시장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시장의 도전’으로 명명하고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응전’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이 처

성이 높다.

- 3) 북한의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실장인 리기성의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들을 보조적 공간으로 하여 계획경제의 일시적인 공백을 메꾸는 방향에서 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관리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기성, “새 세기 우리 식의 사회주의경제리론을 연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7년 2호, 11, 13쪽.

한 현실 상황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북한 당국의 고민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⁴⁾

2. 시장의 도전과 국가의 응전

1) 사회주의에서의 계획과 시장

시장 사회주의의 초기 문제의식은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즉, 계획경제의 정보가 완전히 정책결정자에게 집중될 수 없는 조건에서 시장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초기 시장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있었다. 초기 시장 사회주의론을 주장했던 랑게(Lange)나 브루스(Brus)의 주장은 결국 시장의 도입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이며,⁵⁾ 이에 대해 미제스(Mises)나 하이에크(Hayek), 그리고 최근의 코르나이(Kornai) 등은 시장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불가능성은 1990년대 이후 더욱더 강화되어, 이제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만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4) 이 글이 주로 북한 당국의 텍스트 분석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남한의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현실의 모습보다는 그를 둘러싼 북한 당국의 ‘정책 지향’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5) 랑게와 미제스의 논쟁에 대한 짧은 글로는 박명호,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합리적 경제계산에 관한 논쟁』(서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브루스의 분권화 모형은 W. Brus,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s*, translated by R. A. Clarke(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참조.

있다.⁶⁾

시장 사회주의의 실패는 이론적인 논쟁을 잠시 접어둔다면, 결국 계획과 시장의 결합 실패 혹은 시장에 의해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계획경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헝가리 사례 등을 살펴보면, 시장의 계획 영역으로의 침투와 확산에 대해 계획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장 확산에 점차 계획 경제가 침습당해왔다. 현재의 중국 역시 비록 중국 당국의 통제와 점진적 방식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확산에 따른 강제적 변화의 측면이 존재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이 뒤따르고 있다.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은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주의 기업 운영자의 ‘시선의 정치’⁷⁾는 물론 가격 격차와 통제,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계층화 문제 등이 나타나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가치법칙의 문제, 상품 - 화폐의 문제 등을 낳고 나아가 소유권 문제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경제 영역에서의 문제 이외에도 정치 영역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바로 이데올로기(정치)와 경제, 즉 홍(紅)과 전(專)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초기 홍(이데

6) 결국 오늘날 시장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아무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Michael Mandelbaum, “Introduction,” Shafiqul Islam and Michael Mandelbaum(eds.), *Making Markets: Economic Transformat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Post-Soviet State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3), p.6.

7) 여기서 ‘시선의 정치’는 ‘한 눈으로는 시장을, 한 눈으로는 정책 결정자’를 바라보는 기업소·공장 책임자의 시선을 의미한다. 코르나이는 헝가리에서 공장 관리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J. Kornai,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David Stark and Victor Nee(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32~94.

올로지) 우위의 정치 질서가 유지되지만, 점차 전(경제) 우위의 질서로 변모되는 경향이 있다.⁸⁾ 이는 유토피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력 발전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경제적 실리 추구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정치의 우위에 서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치의 우위 속에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보수-온건의 정치 세력의 경쟁이 시장의 확산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시장의 이익’에 대한 분배의 권한을 둘러싼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띤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보면 결국 시장의 도입과 확산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가 정치 엘리트의 분열로 이어지고, 이것이 체제 전환에 가장 큰 변수였음이 나타난다.⁹⁾ 결국 시장은 경제 영역에서 점차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고, 체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의 도입과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를 보면, 개혁·개방 혹은 변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상의 명제를 재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재해석 과정은 곧 사상의 변화, 변질을 추동한다.¹⁰⁾ 결국 경제적 변화의 정치·사상적 변화로의 발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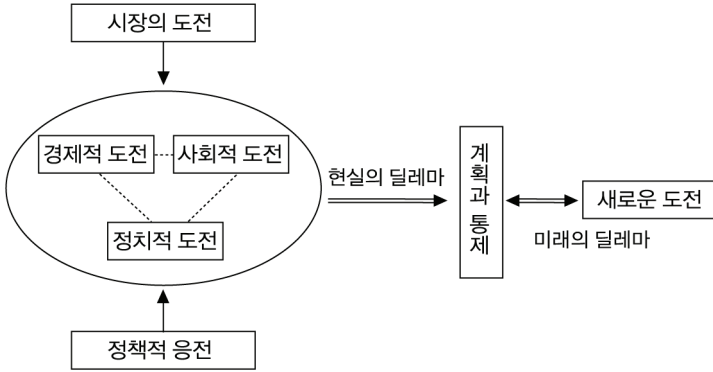
시장의 도입이 가져오는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것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들

8) 이를 알프레드 마이어는 체제건설(system-building)과 체제관리(system-management)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Char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9) 권만학은 사회주의 개혁과 붕괴 과정에서 결국 정치엘리트의 분열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고 주장한다. 권만학,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붕괴와 개혁,” 『한국정치학회보』, 35권 4호.

10) 전현준 외, 『김정일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8), 75쪽.

<그림 1> 시장의 도전과 국가의 응전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계획과 시장의 결합에 따른 문제로서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 및 노동, 임금, 가격체제 등의 제반 경제 영역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인 것으로 시장의 도입에 따른 소득의 차이,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의 분리, 계층별 시장 상황의 차이 등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정치 영역에서는 주로 이데올로기적 문제로서 사회주의의 미래, 시장의 권력을 둘러싼 문제 등이 나타난다. 대체적인 경험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과 해결로 집중된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 문제는 경제 그 자체의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획과 시장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이를 둘러싸고 정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둘러싸고 정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정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통제의 강화는 ‘미래의 딜레마’를 생산해내며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헝가리 사례처럼 시장의 도입과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그에 따라 점차 계획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결국 ‘시장의 반란’으로 인해 체제의 변화가 진행되었다.¹¹⁾ 중국 역시 점진적 방법을 통해 의도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문제와 도전 속에서 당국의 끊임없는 조정과 응전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시장의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의 응전’이 계획과 통제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문제

북한에서 시장은 다른 사회주의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경제적 의의를 찾기 힘든 조그만 영역으로만 제한되었다.¹²⁾ 그러나 1990년대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자연시장의 확산에 따라 2002년 ‘7·1조치’ 이후 합법화되었다. 시장의 합법화는 시장을 통한 농산물·공산품 거래의 확대, 국영기업 및 개인들의 시장 참여로 확대의 길을 걸었고, 일상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았다.¹³⁾ 사실 북한에서 시

11) 헝가리 사례를 ‘시장의 반란’으로 설명한 것으로는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8권 1호(2004).

12) 북한의 농민시장에 대해서는 정은미, “농민시장을 통해서 본 북한 사회의 변화”(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3) 북한에서 시장의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홍민, “시장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접근방법 모색』(제1회 동국대 일상생활연구 학술회의 자료집, 2008년 7월 4일).

장의 도입은 아래로부터의 동력과 위로부터의 승인을 통해 가능했다. 2002년 ‘7·1조치’ 이후, 시장은 북한의 경제운영에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거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문제들의 이론적·실천적 해법이 요구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 문제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둘러싼 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황이다.¹⁴⁾ 또한 국가 재정 문제에서는 수입 확대와 지출 균형을 보장하는 문제, 통화량 조절 문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문제, 그리고 현금유통 범위 등이 북한 경제 운영에서 당면 문제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 도입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거시경제 운영에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감가상각금 처리 문제와 시장의 가격 통제를 위한 경제적 방법과 통화량 조절을 위한 대책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 당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확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리기성은 “나라의 재정상황도 상당히 어렵다. 2005년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고난의 행군’이

14) 이는 기업소의 경영상 독자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이다. 『경제연구』에 따르면 ‘기업소의 일면적 리익과 국가의 일면적 리익’만을 강조하는 편향을 경계하고 있다. 박춘화, “독립채산제기업소 재정관리에서 국가적 리익보장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2005년 1호, 33쪽.

<표 1> 재정관련 개선조치 전후 예산 수입항목 비교

7·1조치 이전		7·1조치	7·1조치 이후
국가기업이익금		국가기업이익금	좌동
봉사료 수입금			
거래 수입금	국영기업소 생산품 관련	협동단체이익금	좌동
	생산협동조합 생산품 관련		
협동단체이익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폐지)	감가상각금(재편입)
사회보험료(개인부담)		좌동	개인 및 기업부담(확대)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좌동	좌동
-		토지사용료(신설)	부동산사용료(확대)

출처: 문성민, “북한재정제도의 최근 변화 평가,” 『통일경제』, 2009년 봄호, 73쪽.

시작되기 전인 1994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 재정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⁵⁾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재정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며, 그 영향력은 자본주의 국가 일반과 비교해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¹⁶⁾ 먼저 북한의 재정은 ‘7·1조치’에 의해 기존 국가 납부금을 국가기업이 득금으로 통합해 단순화했고, 감가상각금을 기업에 유보했으며,¹⁷⁾ 토

15) 리기성, “21세기 초 북한의 경제건설 환경,” *ERINA REPORT*, Vol.72(2006.11), 『KDI 북한경제리뷰』, 2006년 11월호 재수록, 108쪽.

16) 북한의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17) 감가상각금은 2002년부터 기업소에 채투자 자금으로 유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현준 외, 『김정일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전망』, 114쪽. 그러나 개혁의 부작용과 세수 확대 차원에서 감가상각금을 다시 국가에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연구』, 36집 3호

지사용료를 통해 재정 수입의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국가 재정은 크게 증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예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⁸⁾ 그리고 이러한 예산 확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사용료의 신설이다. ‘7·1조치’에 의해서 토지사용료를 신설했지만 이를 부동산사용료로 확대해 예산 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나라의 재정자원을 빠짐없이 장악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¹⁹⁾ 부동산사용료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개인들

(2008), 187쪽.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7년 2호와 『경제연구』, 2008년 4호에 따르면 기업소자체자금으로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들고 있다. 즉, “적립된 감가상각금을 고정재산의 단순재생산에 리용하는 경우에도 로동수단의 개건현대화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감가상각금의 기업소자금으로의 적립을 말하고 있다. 최종건,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현대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7년 2호. 또한 비록 능동적인 성격을 띠지는 못하지만 감가상각금을 일시적으로 기업소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운미, “독립채산제기업소 자체충당금의 합리적 리용방도,” 『경제연구』, 2008년 4호. 이로 보아 기업소에 유보된 감가상각금 사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로의 납부를 실시했지만, 2004년 마련된 「재정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기업소의 유보자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8) 이와 관련 홍성남은 “국가예산편성사업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려면 국가예산수입지출의 모든 항목에 걸쳐 절약예비를 철저히 탐구동원하여야 한다. …… 예산지출보다 예산수입에 균형화기준의 무게를 두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예산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조건에서 균형화사업을 보장하는 방도는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길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남, “현 시기 국가예산자금을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특징,” 『경제연구』, 2005년 2호, 32쪽.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예산자금의 균형보장은 수입을 먼저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지출을 맞추어나가는 방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과 ‘수입원천확보에 따라 지출을 정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홍성남, “현 시기 국가예산균형보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6년 2호, 66~67쪽.

의 국가소유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²⁰⁾

그러나 현재까지 부동산사용료 징수가 예산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²¹⁾ 예산 운영에서의 문제는 특히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에 따라 국방비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 따라 국방공업에 선차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예산에서 국방공업에 투자되는 비중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²²⁾ 이는 자원분배의 왜곡현상을 넘어서 예산 운영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예산운영에서 2003년 이후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국가기업이득금이 예산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기업소의 정상화 없이는 예산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문헌도 “나라의 자금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예산수입과 그 원천의 기본 부분은 국영경리, 그중에서도 국영공업의 내부축적”이며 “농업 부분의 내부축적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조세공간을 통한 개인소득의 재분배수입은 국가예산수입원천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

-
- 19) 강철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 관철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8년 3호, 68쪽.
 - 20)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6년 4호, 31쪽.
 - 21) 이와 관련해 양문수는 현재 부동산사용료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6~2007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5.3%인데 반해 부동산사용료의 증가율은 평균 13.7%로서 총재정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사용료를 통한 징수가 계속 증대할 것임을 암시한다. 양문수 외,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체계 연구』(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11), 98쪽.
 - 22) 북한은 “국방공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는 것은 인민경제 그 어느 부문보다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시간적으로나 량적으로 먼저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조웅주,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5년 2호, 8쪽.

<표 2> 북한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구성비(2003~2007)

		2003	2004	2005 ^{****}	2006	2007
재정수입	금액(억 원)	3,323.2	3,375.5	3,917.0	4,092.9	4,341.0
	증가율(%)		1.6	16.1	4.5	6.1
	계획대비 달성률(%)	100.9		100.8	97.5	100.2
전년 대비 재정 수입의 항목별 증가율* (%)	국가기업이익금**	5.0	16.5	14.2*	7.2	6.4
	협동단체이익금	3.3		24.3*	23.2	4.5
	사회보험료	6.7		5.7*	141.0	15.1
	토지(부동산)사용료	3.7			12.0	15.4
	고정재산감가상각금				1.8	9.6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				1.7	
	기타				0.9	
재정 지출	금액(억 원)	3,234.4	3,488.0	4,056.9	4,192.8	4,406.0
	증가율(%)		7.8	16.3	3.3	5.1
	계획대비 달성률(%)	98.2	99.3	104.4	99.9	101.7
재정 지출에서의 비중(%)	인민경제비	23.3	41.3	67.7	40.8	41.0
	인민적시책비***	40.5	40.8	19.1	40.7	40.8
	군사비	15.5	15.6	15.9	16.0	15.7
	국가관리비		2.3		2.5	2.5
물가 상승률	UN GDP 디플레이터	-0.4	-1.1	3.6	9.2	3.8
	쌀 1kg 가격			13.8	-0.8	38.9

주: * 전년 대비 항목별 재정수입의 증가율은 전년도에 전망한 수치임(2005년 제외).

** 2002년 이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통합되어 국가기업이익금으로 징수되고 있음. 이는 임금과 경상이익의 합계에 해당하는 번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형태임.

*** 인민적시책비는 2000년까지 사회문화시책비로 명명되었음.

**** 2005년 괄호 안 수치는 해당 항목의 증가율 실적임. 2005년의 재정수입의 항목별 증가율 수치는 결산치임.

자료: 최고인민회의의 자료, 한국은행, UN통계국, 좋은 벗들, CIA, 탈북자조사자료, 양문수 외,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체계 연구』, 68쪽.

다.²³⁾ 즉, 예산의 압도적 비중이 국영경리 부문이며, 농업과 개인 조세 부문이 보충적인 의미를 갖는 조건에서 예산 확대는 결국 국영경리의 정상화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영경리의 정상화와 재정확대의 관계가 자칫 ‘순환고리’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즉, ‘국가 투자의 확대 - 국영 경리의 정상화 - 국가 수입의 확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국가 투자의 확대가 어려운 조건에 당면해서는 재정 수입의 확대 역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예산수입의 확대 이외에 지출에서의 균형을 위한 방도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입을 우선으로 하여 지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투자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일례로 중앙이 담당해온 사회보험(보장)의 책임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즉, 과거 지방예산으로 사회보험(보장)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부족하면 중앙의 보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중앙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²⁴⁾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지출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과 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7·1조치’에

23) 정광영,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재정적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8년 4호, 82쪽. 이와 관련 국가재정 확대에서 시장 사용료 및 국가납부금도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에 따르면 2004년 시장 사용료는 1만 원 안팎이며, 국가납부금은 하루에 공업품 500원, 육류 300원 정도라고 한다.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비교경제연구』, 12권 2호(2005), 15쪽.

24)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 거시경제의 변화,” 『수은북한경제』, 2007년 여름호, 28쪽. 이와 관련해 “공로자들을 비롯하여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은 국가부담으로부터 점차 당사자와 기관, 기업소부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자금은 당사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점차 늘이거나 기업소생활비자금원천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조웅주, “현 시기 노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5년 4호, 74쪽.

따라 기업에 유보되었던 감가상각금을 다시금 국가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생산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조건에서 감가상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다시금 국가에 종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시장의 도입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의 하나는 통화량 조절의 문제이다. ‘현금과 무현금의 전체 화폐유통량과 상품 및 상품적 형태(봉사포함)의 가격총액과의 일치를 요구하는 법칙’²⁵⁾ 화폐유통 법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화량 조절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모든 상품거래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도 가치와 가치형태의 지난 시기의 구분을 개념적으로만 의미를 두고, 실제로는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²⁶⁾ 화폐유통량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기업들 간의 거래에 원칙적으로는 무현금거래를 적용하지만 일부 생산수단들의 거래에서는 현금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한 데에서 현금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의 도입에 따라 시장에서의 현금 거래와 기업의 시장 거래 및 대외 무역에서의 현금 사용이 증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²⁷⁾ 상품 - 화폐 관계의 활성화에

25) 리창혁, “화폐유통법칙의 작용영역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2005년 3호, 30쪽.

26) 리창혁은 “가치와 가치형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들이지만 사회적 필요로동량을 반영하는 경제법주리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가치법칙의 내용적 작용에서나 형태적 작용에서나 다 준 것만큼 받는다는 등가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창혁, 위의 글.

27) 최수영은 북한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 거시경제의 변화,” 33쪽.

다른 화폐유통량 증대는 당연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것이 국가의 재정 통제와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통화량 증대와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재정통제²⁸⁾와 화폐자금의 은행을 통한 통제 강화,²⁹⁾기업들의 현금보유량의 한도 설정,³⁰⁾ 개인 수중 현금의 은행으로의 집중³¹⁾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통화량의 조절이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화폐유통을 벗어난 화폐유통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획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시장적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통화량 조절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시장에서의 통화량 통제이다. 즉, “지역시장동태가 나라의 통화조절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³²⁾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지역시장에 대한 행

28) “국가예산지출이 류통화폐량의 증대로 이어지는 길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은 통화조절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006년 2호, 37쪽

29)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자기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하여서만 화폐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다.” 홍영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006년 4호, 26쪽.

30) “기관, 기업소의 현금보유한도를 정확히 규정해주고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을 제때에 은행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소의 현금 보유는 기업소의 협소한 이익과 비법적인 거래와 유용, 낭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홍영의, 위의 글, 27쪽. 한편 기업들의 외화 보유한도는 수출로 벌어지는 액수의 40%로 인상되었다고 한다. 배종렬, “7·1 조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변화: 평가와 전망,” 52쪽.

31) “주민 수중에 깔려있는 현금량을 최대한으로 계획적인 화폐유통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37쪽. 주민 수중의 현금을 계획적인 화폐 유통으로 끌어들이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시장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저금, 예금사업, 보험 공간 등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2) 리원경, 위의 글, 37쪽.

정적·재정적 통제만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³³⁾

통화량 조절에서 북한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무현금유통을 통한 통제로 보인다. 기업소가 은행을 통한 거래를 하고, 은행이 이를 장악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여건상 계획적인 통화량 조절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계획과 더불어 통제 방법을 통해 시장의 영역 확대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통화량의 문제는 재정 통제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격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재정지출에 따른 통화량과 시장에서의 현금 유통에 따른 가격 설정 등이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한의 조정체계가 과거 ‘관료적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여기에 ‘시장적 조정’이 일정한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⁴⁾ 북한 당국 역시 이미 시장에서의 행정적·재정적 통제만으로 시장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⁵⁾

33) 북한 역시 “화폐유통의 공고성은 고정가격으로 국가상업망에 들어오는 상품량에 의해 보장되는 것만큼 유통계에서 유통되는 상품량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원의 구매력을 해당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화폐유통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공급의 정상화라는 점이다. 강경희, “화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2008년 4호, 50쪽.

34) 북한에서 ‘관료적 조정’과 ‘시장적 조정’에 대해서는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 조건』(과주: 도서출판 한울, 2008).

35) “시장상품유통과 가격변동이 자연발생성을 띠는 조건에서 일반적인 행정적 통제나 재정은행기관들이 실시하는 재정통제의 방법만으로는 시장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작용을 가할 수 없다. 지역시장관리의 현 실태는 행정적성격의 한도가격설정이나 단순한 가격공시방법으로는 시장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중앙은행기관들은 재정기관, 시장관리기관들과 합심하여 경제적 방법으로 시장가격에 대한 직접적작용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인 가격통제는 이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여기에 행정적 통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가격공시 방법을 넘어서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와 합의제 가격³⁶⁾ 등 다양한 가격체제의 존재는 이미 가격에 대한 과거의 일원론적 체계가 더는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격 조정의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물의 ‘시장을 위한 생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계획의 축소와 위축 혹은 계획 명령을 지키지 않는 현상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가격을 높여 수익성을 늘이는 것이 목적으로 될 수 없”음을 지적하지만,³⁷⁾ 현실은 개인과 기업 모두 한쪽 눈으로는 시장을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수립³⁸⁾과 앞서 말한 재정통제와 통화량 조절 등을 통한 시장 가격에의 개입을 적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가격의 ‘변동가격’으로 변화되는데도 ‘7·1조치’ 이후의 가격 정책은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 가격 설정, 생산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 원칙,³⁹⁾ 제품의 등급별 차이에 따른 가격 설정⁴⁰⁾을 추진하

을 가하여야 한다.”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37쪽.

36) 백화점 등은 2003년경부터 ‘합의제 가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년 여름호, 7쪽.

37) 류운출,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범주, 공간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2호, 18쪽.

38) 주현,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4호, 8쪽.

39) 최경희, “소비상품가격제정의 출발점과 기준,” 『경제연구』, 2006년 1호, 32~

는 등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6년을 넘어서면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결합과 유통범위를 중요하게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영기업소 생산물의 물자교류시장 및 지역시장으로의 유통범위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¹⁾

가격의 문제는 계획의 영역에서만 조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도 시장 가격의 공시나 행정적 통제를 통한 시장 가격 조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시장상품유통과 가격 변동이 자연발생성을 띠는 조건을 인정한 상태에서 행정적 방법의 강화보다는 경제적 방법을 통한 가격 조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²⁾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결국은 상품의 국가 공급 능력의 문제와 상품화폐관계에 따른 재정적 통제 등이 결정적인 변수일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최근 부동산가격 산정과 광물자원의 매장량을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이 강조되고 있다.⁴³⁾ 이는 모든 경제 거래에 화폐를

33쪽.

- 40) 곽태철,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5년 4호. 이러한 정책은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력의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 물질적 동기의 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 41)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2호, 14쪽. 국영기업소의 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격 조절에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지역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 등지로부터의 수입 물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42) 가격 설정에 원칙적 요구로서 ‘사회적 필요요동지출에 기초한 제정’과 ‘가격의 능동적 조절’ 모두를 들고 있다. 김원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8년 1호, 39~41쪽.
- 43) 광물자원매장량을 가격으로 제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을 통한 자원탐사의 결과 얻어진 광물자원을 상품화폐관계를 매개로 광물개발기업소에 넘겨주기

매개로 한 계산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와 기업 간 거래의 엄격한 계산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의 문제는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기업소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서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7·1조치’ 이후, 물가와 임금의 차별적 인상에 따른 인민생활의 변화에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는 직접적으로 인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는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변수입의 인정 등 기업소의 활동에도 계획과 계획 외 생산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줄이고,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경제적 통제를 통한 조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결국은 공급 능력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생산의 정상화와 국정가격의 안정화, 국영 유통망을 통한 공급의 확대가 될 것이다.⁴⁴⁾

‘시장의 도전’은 경제 분야에서 상품-화폐 관계의 확대, 기업소 활동의 계산체계 문제, 국가 재정 확대와 지출 균형,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의 활용 문제 등 경제 전 영역에 걸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 역시 정치적 방법만으로는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위한 계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국가예산의 지출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며, 기업소의 경제활동에서도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좀 더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허하명, “유용광물탐사매장량 가격제정의 필요성,” 『경제연구』, 2007년 2호, 29~31쪽.

44) 북한 역시 이를 위해 사회주의적 상품공급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는 주로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시장을 통한 상업활동의 올바른 결합을 강조했지만, 2008년쯤에는 오히려 국가상업망의 활성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주현,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 요구”; 선우련희, “사회주의적 상품공급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2008년 4호.

의 도전'은 단지 경제적 문제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경제에서 출현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시장 통제의 정치

1)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

시장의 도입은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도 강제했다.⁴⁵⁾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대응해 시장 참여를 통한 '자력갱생'의 인민생활을 꾸려나가야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사회주의적 행위규범에 반하는 비사회주의적 의식과 행동의 확산을 경험해야 했다. 오랫동안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보호에 익숙했던 사회생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다. 대표적으로 배급제의 사실상 붕괴는 국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제수단의 상실이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능력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개인적 지구력을 마련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여기에 '7·1조치'에 따른 국가 서비스 제한, 차별적 임금 인상과 소득 수준의 정당화, 물질적 동기의 강화에 따른 화폐 가치의 재인식, 시장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공간의 확장 등에 따라

45) 북한에서 시장의 비중(유통 영역)은 1990년 7%, 2000년 10%, 2006년 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통일부 내부보고서, 이경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38쪽에서 재인용.

여러 가지 변화를 동시에 맞이해야 했다. 사회적 변화는 가장 먼저 1990년대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의식의 변화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립시켰다. 즉, ‘실리’에 대한 전 사회적인 동의와 우선 가치였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많은 보고서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핵심적으로는 집단주의적 가치의 약화와 개인주의적 가치의 강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결국 시장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기저에 놓여 있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의식의 변화가 결국은 정치적 의식의 변화로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사회적 가치-사상적 의식의 변화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의 변화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것은 의식의 변화가 주로는 물질적 삶의 변화에 따른 ‘즉자적 성격’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즉, 목적의식적인 체제-사상의 변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상적 교양과 검열, 나아가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상이론적 정당화가 추구되었다.⁴⁶⁾ 또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형성과 확산을 의도적으로 시도했다. 1990년대 후반 나타난 ‘선군정치’가 점차 그 사상적·이론적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이 제창되었다.⁴⁷⁾ 여기에 정치적 이론만의 문제가 아닌 ‘실리주의’, 즉 물질적 가치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로서의 가치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혁명적 군인정신’과 ‘실리주의’

46) ‘강성대국’론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담론 투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7) 사실 ‘선군정치’나 ‘혁명적 군인정신’은 선후차를 따지기 어렵다. 다만 ‘선군정치’ 확산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이 제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면서도 실상은 하나로 결합된 사상 교양의 핵심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갔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곧 물질적 삶의 변화에 기반을 둔다. 의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사상적 대응에도 현실에서의 물질적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서 소득 격차의 확대 현상을 들 수 있다. 소득의 격차는 시장 참여에 따른 소득 격차, 공장 간 소득 격차, 직종 간 소득 격차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사실 공장·기업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주의’ 확산에 따른 소득 격차의 확산은 불가피한 것이다. 북한 당국 역시 정당한 노동에 의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⁴⁸⁾ 개인 간 소득 격차는 또한 시장에 의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평등주의적 삶에 익숙했던 주민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평등주의적 삶의 가치 대신에 물질주의적 삶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졌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계층 상승을 대신해 경제적 계층 상승의 욕구가 커지는 효과를 낳고 있다. 여전히 정치적 계층 상승이 우위를

48) 이미 ‘7·1조치’의 실시를 전후로 ‘평균주의’의 해체는 물론 정당한 노동을 통한 소득의 획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전통적인 물질적 자극의 강조와 더불어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와 의의도 적극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 사회주의』(서울: 선인, 2004). 북한은 분배의 유일한 척도는 오직 사회에 지출하는 노동의 양과 질뿐이라고 하고 있다. 전영명, “사회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005년 3호, 19쪽.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처럼 소득격차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까지로 통제하고자 한다. 즉, 물질적 보수가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을 부식시키거나 생활수준상 차이를 크게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보수의 크기에서 “지나친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황철, “현 시기 물질적 자극공간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5년 2호, 55쪽.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제적 계층 상승의 욕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⁴⁹⁾

소득 격차의 확대는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 교육의 기회 등의 가치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정되었던 계층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직업 선호도의 변화는 탈북자들의 증언 속에서 확인되고 있고,⁵⁰⁾ 그에 따라 과거의 정치적 기준이 점차 경제적 기준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기준의 확산이 아직 정치적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 중요한 변화의 모습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정치적 충성과 성분 등의 고전적인 평가에 앞서 실력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약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곧 체제 균열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사회의 변화는 엘리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이러한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마무리되거나 타협을 통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결국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정치사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

49) 북한의 계층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7).

50) 직업선택의 선호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사회에서 존재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통, 무역, 상업 등의 분야를 선호하는 등의 변화는 분명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선호도 등 북한 주민들의 변화하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6)을 참조할 것.

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된다.⁵¹⁾ 즉, 사람에 대한 통제이며 사회 질서 유지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역할의 강화는 사상교양과 통제의 강화라는 전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희망의 미래 담론’을 통해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⁵²⁾

일반적으로 국가는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와 ‘물리적 강제’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동원한다. 북한 역시 ‘동의를 확보’로서 이데올로기적 동의와 정치적 정당성의 확인 등을 강조한다며, ‘물리적 강제’로서 통제와 강압적인 검열과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⁵³⁾ 2007년경부터 북한은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시장에 대한 통제와 이론적 재정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통제를 위한 검열과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이 확산되는데도 언제든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 역시 행정적·정치적 통제만으로 ‘시장의

51) 김일성,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3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11쪽.

52) ‘미래 희망의 담론’의 대표적인 예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북한의 이러한 방식은 이미 ‘고난의 행군’시기 제시되었던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지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적 어려움을 이러한 ‘미래의 담론’을 통해 주민들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이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일종의 ‘말씀’의 정치학인 것이다. ‘말씀’의 정치에 대해서는 조은성, “김일성과 김정일 ‘말씀’의 사회통합적 기능”(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3)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사회통제와 조직생활,”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새인식 5: 북한의 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6).

도전'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방법을 통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2) 시장 통제와 정치의 확대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2002년의 '7·1조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북한의 '위로부터의 개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1조치'에 따른 시장의 도입은 '시장의 도전'을 낳았고, 그 결과 북한 사회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다. 이미 1990년대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한 사회적 이완 현상에 덧붙여,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당적 통제의 이완, 계층 간 분화 현상 등이 발생했다. 시장의 도입에 따른 문제는 결국 북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변화를 추동했다. 즉, 사상의 문제였던 것이다. 1990년대의 '붉은기 사상',⁵⁴⁾ 1990년대 말의 '선군정치-선군사상'과 '강성대국'론 등은 위기 극복의 담론이자 동시에 사상 교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주체사상'에 따른 '하위 담론'으로서 선군정치는 주민들의 사상 교양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⁵⁵⁾ 즉, 경제·사회 변화에 북한의 대응은 '사상'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상 교양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⁵⁶⁾ 그것은 물질적 생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54) 이에 대해서는 김근식,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과 당내 갈등,” 『통일문제연구』, 1999년 하반기호.

55)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정영철·한동성, 『서울과 도쿄에서 평양을 말하다』(서울: 선인, 2007).

56) 이와 관련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친 세대, 즉 지금의 20~30대는 상당한

주장하듯 ‘빈 밥그릇을 앞에 두고 사회주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⁵⁷⁾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상교양의 강화와 함께 물리적·행정적 통제가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을 대상으로 한 통제와 더불어 시장에 의해 파생된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한 통제와 검열의 강화로 나타났다. 북한의 통제가 사상적 통제, 물질적 통제, 물리적·법적 통제의 세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급제의 복원을 통한 물질적 통제의 시도는 현 시점에서 동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2005년경 선언한 배급제의 정상화는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결국 행정적·법적 통제를 동원한 물리적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시장에 대한 통제는 시장 참여 연령의 제한과 품목의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⁵⁸⁾ 이러한 조치는 당국의 대중 동원과

사상적 이완과 학습의 부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혁명 3세, 4세에 대한 사상적 준비와 관련된 기 때문이다. 김동진,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번영을 위한 근본담보,”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경제학』, 2006년 2호.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이례적으로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 57) 이와 관련 인민생활의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비품에 대해 일일잡화 206가지, 건재상품 102가지, 농촌상점상비상품 50가지로 규정했으며, 된장, 간장, 소금, 성냥, 비누, 치약, 칫솔, 신발 같은 1차 소비품의 정상적인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손영석, “현 시기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7년 4호, 52쪽.
- 58) 양문수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참여 연령 제한, 판매 가능 품목 제한, 상행위 가능 공간 제한 등을 2007년부터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 연령에 대해서는 45세 미만 여성의 상행위 금지에서 출발해, 2007년 12월에는 50세 미만으로 강화되었다고 한다. 양문수, “소유제 변화 없는 시장화 정책,” 윤대규 엮음, 『북한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8), 131~145쪽. 품목 제한에 따라 화장품, 의약품 등의 공업품의 단속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경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연구,” 46쪽.

근로자들의 공장·기업소로의 복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동력 확보인 동시에 시장으로 인한 전문 인력의 유출 차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업에 노동력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시기에는 시장의 운영 시간을 오후 4~5시 이후로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⁹⁾ 또한 시장의 확대를 막고 말 그대로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는 ‘상점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시장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국영 상점 - 국영 유통망’을 통한 거래를 좀 더 활성화·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했던 조치로 분석된다.⁶¹⁾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국가의 공급 능력의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공급 능력의 확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생산의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력의 증산, 원자재 조달의 안정성, 설비의 갱신이 요구된다.⁶²⁾ 무엇보다 근로자

5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54호(2008년 11월 25일).

60) 시장의 상점화에 대해서는 정영철·한동성, 『서울과 도쿄에서 평양을 말한다』.

61) 전현준은 수익을 내는 개인 또는 기업에 경영 위탁한 국영상점의 환원 조치도 내렸다고 한다. 전현준 외, 『김정일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전망』, 150쪽.

62)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서 북한에 필요한 것은 전력, 설비, 물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김동식, “올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 『경제연구』, 2005년 1호; 한성기, “정보산업시대 새로운 경제구조 확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6년 1호; 한철주, “공업의 현대화는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 『경제연구』, 2007년 1호; 김균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방공업의 역할,” 『경제연구』, 2008년 1호. 이 중 전기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만 제대로 대주면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크게 문제로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서재영·박제동·정수웅,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79쪽. 리기성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력의 변동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2005년에는 발전량이 11% 증가했다고 한다. 리기성, “21세기 초 북한의 경제건설 환경”.

들의 노동의욕 고취와 공장·기업소로의 복귀 및 최대의 노동력 동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문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1990년대 이후 대안의 사업체계가 흐트러지고 일부에서는 국가가 원료와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등한시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⁶³⁾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공장·기업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 가지 규율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즉, 계획규율 강화, 재정규율 강화, 노동규율 강화이다. 계획규율 강화는 시장의 확산에 따른 국가 계획 수행의 열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규율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 재정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수입을 늘이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국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규율 강화는 공장·기업소로의 근로자 복귀 및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⁶⁴⁾ 또 하나는 시장의 확대와 개인 경제 활동의 증대 및 다양화의 결과 비공식적인 노동자 고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⁶⁵⁾ 그러나 노동규율이 강화되는데

63) 윤재창, “현 시기 경제관리를 우리식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07년 1호(54호), 15쪽.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국가가 원료와 연료, 자재를 다 책임지고 보장해줄 수 없는 조건에서 공장, 기업소가 무역을 통해 해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서재영·박제동·정수웅,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101쪽.

64) 2004년 8월 11일, 김정일이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도 세워 주시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규율의 문제는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재창, “현 시기 경제관리를 우리식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 15쪽. 한편 로동행정사업이 흐트러짐에 따라 직장 이탈이나 시장으로의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석남,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2004년 9호, 49쪽, 이경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연구,” 47쪽에서 재인용.

65) 조정에에 따르면 시장의 확산에 따른 비공식적 개인 고용 현상이 나타나자,

도 공장과 기업소의 정상화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공장과 기업소로의 유인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소 간의 소득 격차가 큰 상황, 그리고 시장을 통한 개인 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생산의 정상화가 없는 현장으로의 복귀는 결국 강제적 방법의 동원일 수밖에 없다.⁶⁶⁾

이러한 규율의 강화는 곧 국가에 의한 경제 지도 사업의 강화, 즉 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문제로 귀착된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대한 입장을 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를 가르는 척도로 규정하고 있다.⁶⁷⁾ 또한 지속적으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및 기업소의 자율성 증대 등의 조치에 따라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의 도입에 따른 ‘반사회주의적 현상’의 발생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 방법에 의한 통제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즉, 행정적·물리적 통제의 강화인 것이다.⁶⁸⁾

김정일이 직접 2006년 3월 ‘노동자 개인고용금지’ 조치를 하달할 정도로 노동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143쪽.

- 66) 일부 보고에 의하면 개인들의 가계소득의 80%는 시장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병욱, “북한사회에서 붉은 자본가 등장 가능성,” 평화재단 제7차 전문가포럼 자료, 이경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연구,” 40쪽에서 재인용.
- 67) 김정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 『경제연구』, 2005년 4호, 6쪽.
- 68) 북한의 강제적 통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영운은 ‘5·11상무’, ‘10·9상무’ 등이 조직되고 검열과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5년 2월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매대를 없앨 데 대하여’라는 방침이 하달되었고, 당구장 폐쇄 및 당구게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고 한다. 김영운, 『북한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1990년대부터 시장에 점차 길들여진 상태에서 시장을 축소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시장의 확산을 방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시장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의 힘을 동원해 전반적인 사회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7년경부터 부쩍 강화되고 있는 시장과 사회에 대한 통제의 강화는 경제 논리에 앞서 정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이러한 조치들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성대국’론의 담론의 확산과 정당성 확보, 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의 정치적·사상적 문제와 동시에 경제적 성과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와 노동력 동원,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자원 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결국 북한 내부 정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4. 마치며: 계층의 시장

북한에서 시장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로 기능하는 동시에 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시장을 통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강화되는

125쪽. 양문수 역시 최근 북한의 통제 강화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시장이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으로 되었다”라는 김정일의 언급에 따라 시장에 대한 통제조치로서 ‘8·26방침’이 나왔고, 주민 대상의 강연제 강에서 “시장 장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근본 원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양문수, “소유제 변화없는 시장화 정책,” 145쪽.

것에 대해 통제를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주민 생활의 주요한 공간으로, 그리고 경제적 동기 부여의 주된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시장이 정치적으로는 ‘계류’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보조적 수단’임을 말해준다.⁶⁹⁾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합법화된 시장은 이미 북한 사회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은 단순히 상품의 거래만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등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시선의 정치학’을 발생시킴으로써 계획 영역을 꾸준히 침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시장의 확산은 곧 계획의 축소였고, 국가 능력의 약화를 동반했다. 북한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예방하고, 계획경제와 시장을 조화롭게 결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장의 도전’에 대한 ‘국가의 응전’인 셈이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일방적인 정치적 논리의 동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시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장과의 공존을 위한 경제 이론의 개발, 경제 관리 운영의 혁신 등의 경제적 방법부터 일정한 정치적·물리적 통제까지 다양한 방식의 통제장치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통제는 결국 지금 북한의 현실에서 ‘생산의 정상화’와 국가 공급 능력의 확대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시장의 도입 자체가 국가 공급 능력의 부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도전’은 단순히 경제적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

69) 양문수는 시장이 체제위협적 요소에서 체제 보완적 요소로 되었다고 평가한다. 양문수, “7·1조치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는 북한경제』, 2007년 여름호, 12쪽.

의 변화는 곧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증대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의 발생 등이 뒤따르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통제는 결국 법적·물리적 통제의 동원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통제가 정치·사상적 통제, 물질적 통제, 물리적 통제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면, 지금 북한이 동원하는 통제는 정치·사상적 통제와 물리적 통제로 한정되고 있다. 그것은 물질적 통제—주요 배급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시장은 어쩌면 ‘계류’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과 시장의 공존은 다른 의미로 국가에 의한 ‘시장 관리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역시 계획과 시장의 ‘관리’이자 동시에 계획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시장에 대한 ‘통제’로의 대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미래의 딜레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시장의 도전’과 ‘국가의 응전’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 접수: 6월 9일 / ■ 채택: 7월 24일

참고문헌

- 강경희, “화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경제연구』, 2008년 4호.
- 강철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 관철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8년 3호.
- 곽태철,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5년 4호.
- 권만학,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붕괴와 개혁,” 『한국정치학회보』, 35권 4호.
- 김경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 『경제연구』, 2005년 4호.
- 김규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방공업의 역할,” 『경제연구』, 2008년 1호.
- 김근식,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과 당내 갈등,” 『통일문제연구』, 1999년 하반기호.
- 김동진,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변영을 위한 근본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6년 2호.
- 김동식, “올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 『경제연구』, 2005년 1호.
- 김영운, 『북한경제개혁의 실체와 전망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원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8년 1호.
- 류운출,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범주, 공간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2호.
- 리기성, “21세기 초 북한의 경제건설 환경,” 『KDI 북한경제리뷰』, 2006년 11월호.
- _____, “새 세기 우리 식의 사회주의경제리론을 연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7년 2호.
-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6년 4호.
-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006년 2호.

- 리창혁, “화폐류통법칙의 작용영역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2005년 3호.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_____, “북한재정제도의 최근 변화 평가,” 『통일경제』, 2009년 봄호.
- 박명호,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합리적 경제계산에 관한 논쟁』(서울: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 박춘화, “독립채산제기업소 재정관리에서 국가적 리익보장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2005년 1호.
- 배종렬, “7·1조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변화: 평가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7년 여름호.
- 서재영·박제동·정수용,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선우련희, “사회주의적 상품공급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2008년 4호.
- 손영석, “현 시기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7년 4호.
- 양문수 외,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체계 연구』(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11).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비교경제연구』, 12권 2호(2005).
- _____, “7·1조치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7년 여름호.
- _____, “소유제 변화 없는 시장화 정책,” 윤대규 엮음, 『북한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8).
- 유윤미, “독립채산제기업소 자체충당금의 합리적 리용방도,” 『경제연구』, 2008년 4호.
- 윤대규·김근식,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공법연구』, 36집 3호(2008).
- 윤재창, “현 시기 경제관리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07년 1호(54호).
- 이경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윤대규 엮음, 『북한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8).

-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서울: 서울대출판부, 2007).
- 전영명, “사회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005년 4호.
- 전현준 외, 『김정일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정광영,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재정적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8년 4호.
- 정명남, “집단주의경제관리의 중요특징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006년 2호.
- 정영철,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 『북한연구학회보』, 8권 1호(2004).
- _____,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서울: 선인, 2004).
- _____, “북한의 사회통제와 조직생활,”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새인식 5: 북한의 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정영철·한동성, 『서울과 도교에서 평양을 말하다』(서울: 선인, 2007).
- 정은미, “농민시장을 통해서 본 북한 사회의 변화”(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웅주,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5년 2호.
- _____, “현 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5년 3호.
- 조은성, “김일성과 김정일 ‘말씀’의 사회통합적 기능”(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254호(2008년 11월 25일).
- 주현,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05년 4호.
- 최경희, “소비상품가격제정의 출발점과 기준,” 『경제연구』, 2006년 1호.
-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 거시경제의 변화,” 『수은북한경제』, 2007년 여름호.
- 최종건,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현대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7년 2호.
- 한성기, “정보산업시대 새로운 경제구조 확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6년 1호.

한철주, “공업의 현대화는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 『경제연구』, 2007년 1호.

허하명, “유용광물탐사매장량 가격제정의 필요성,” 『경제연구』, 2007년 2호.

홍민, “시장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접근방법 모색』 (제1회 동국대 일상생활연구 학술회의 자료집, 2008년 7월 4일).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년 여름호.

홍성남, “현 시기 국가예산균형보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6년 2호.

_____, “현 시기 국가예산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특징,” 『경제연구』, 2005년 2호.

홍영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006년 4호.

황철, “현 시기 물질적 자극공간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2005년 2호.

『정치사전』 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Kornai, J.,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in David Stark and Victor Nee(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Mandelbaum, Machael, “Introduction,” in Shafiqul Islam and Michael Mandelbaum (eds.), *Making Markets: Economic Transformat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Post-Soviet States*(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3).

Meyer, Alfred G.,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r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Brus, W.,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s*, translated by R. A. Clarke(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The Application and Control of Market in North Korea: Market as Chicken Ribs(鷄肋)

Chung, Young Chul(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gang University)

The market was introduced as the one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economic crises in North Korea. But the market submits the some questions the North Korea have to solve. I call it as 'the challenge of market'. 'The challenge of market' doesn't mean the just economic affairs as like finance, monetary, price and so on. The economic changes said to be 'the basic cause' are bringing about change of the every life of North Korean people and the society. With these changes, the formation of new human relations, the increasing the materialistic value and social problems are produced.

As the confronting these challeng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strengthening its control through the political force. And the focus of this control lies on the market. However, it is difficult to look it as only political one.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is impossible to shut

down the market, North Korea mobilizes the various control systems from the economic methods such as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ies and reform of the economic management for coexistence with market to the political and coercive controls. But more importantly, in the current situations, the successful control on the market must be impossible without the ‘norm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state supply. The reason is that the market introduction was caused by the short supply of state and this is now on.

At present, it can be said to define as the ‘management of market’ and to replace the market not bring over plan’s side with control. It can be called ‘the politics of market management’. And it is likely to produce new ‘dilemma of the future’. Because ‘the challenges of market’ and ‘state response’ will produce another dilemmas to be solved in the future.

Keywords: The challenge of market, State response, Market, Plan, 7·1 policy